

“지하철·버스·따릉이까지…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내년 1~5월 시범판매 후 정식운영
경기·인천과 ‘수도권 확대’ 논의
서울 승차, 타지역 하차시 이용
시외지역 승차할때는 이용 불가
연 1.3만대 승용차 이용감소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내년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부터 버스,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벌인다. 시는 수도권 전역에서 통합 환승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분야의 신 패러다임이다. 이 이름 안에 정책 구상의 뜻이 다 들어 있다”며 “탄소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교통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업 네이밍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모두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롯된 고물가, 고금리가 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겼다”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어렵게 결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단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생업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의 가격으로 내년 1~5월 시범 판매된다.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달간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구매하면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시는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포함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이 상이한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지만, 시외 지역에서 타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 버스는 서울 시내라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쓸 수 있다. 시는 향후 리버버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포함 60회 기준)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정책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은 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인천, 경기도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가 정말 절실하다. 결국, 수도권은 교통에 관한 한 한 묶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바라건대 인천시나 경기도가 적극 호응해 시범사업 기간부터 함께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버스가 적자라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재원을 마련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이제라도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750억원으로 예상하는데 지자체가 50%, 운송기관이 5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큰 틀을 짰다. 거기에 맞춰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주는지를 봐 가며 디테일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추후에 숙제로 남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oul.co.kr



韓, 20년간 연간 근로시간 500시간 줄었다

경총, 근로시간 현황·추이 국제비교
연간 1904시간… 감소폭 OECD 1위
“韓, 장시간 근로 국가로 보기 어려워”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지난 2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OECD 회원국 대비 연평균 18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손질 중인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에 노동시간 확대가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韓 실근로시간, OECD 국가 중 최대 폭 감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OECD와 한국 정부 통계를 활용해 한국과 OECD 회원국들의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이었다. 이는 OECD 평균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길었지만, 최근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이후 500시간 가량 감소해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보다 크게 줄었고 이런 감소폭은 조사 대상 35국 중 1위였다. 특히 통계적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 감소폭은 215시간으로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8배에 달했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 소폭 높아

반면, 국내 풀타임(Full-time)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 대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실근로시간은 기존 인식과 달리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풀타임(Full-time)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0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7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주로 활용하는 산술평균 기준으로 OECD 평균과의 주당 실근로시간 차이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2시간정도다.

특히 경총은 이번 분석에서 파트타임을 제외한 풀타임 근로시간을 분석해 비교했다. 파트타임 근로까지 포함한 근로시간 비교는 장기 정책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을 감안했다.

예를 들어 작년 일본의 전체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은 1626시간으로 한국과 278시간 차이 나지만,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31.6%) 비중은 한국(17%)보다 크게 높아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제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차이도 크게 줄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시간 근로는 제도보다는 법 집행의 측면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확대 유지되나

한편, 이번 결과로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노동시간 확대가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은 지난 3월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뒤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비난이 쏟아졌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사회의 회귀 및 소위 공짜 야근이 가능해진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정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5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에 들어갔다. 해당 설문조사는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 발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제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도 달했다”면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7.2% 급증

고용부, 총 지급액 다시 1조 넘어서
신규신청자 8.7만명… 4개월째 증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또 20대의 고용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 일자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2%(6000명) 늘어났다. 증가폭이 4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신규신청자 수 증가폭은 올해 4월 3.1%에서 5월 2.1%로 둔화한 바 있다. 이후 6월 2.9%(2000명), 7월 4.4%(4000명) 등으로 반등한 데 이어 8월 들어 급증한 것이다.

고용부는 “건설업(2700명)과 교육서비스업(1900명), 제조업(1500명)을 중심으로 신규신청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8월 신규수급자를 포함한 총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62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1%(2만4000명) 늘었다.

총 지급액은 6.3%(618억 원) 불어난 1조4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6월 1조245억 원에서 7월 9582억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1조원 대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도 16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원 늘었다.

지난달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2.4%(36만1000명) 증가한 1522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849만 명으로 19만1000명, 여성은 673만5000명으로 17만 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30대(7만 4000명)와 40대(8000명), 50대(9만 7000명), 60대 이상(21만 4000명)에서 증가했으나 29세 이하(-3만 1000명)만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